2022년 / 7월 4주차

연구원 소식

2022년 회원의 날 안내

연구원이 문을 연지도 어느덧 16년이 되었습니다. 2019년 8월 31일과 9월 1일 이틀에 걸쳐 전주 전통문화연수원에서 열린 개원 13주년 기념식 및 회원의 날 이후 멈췄던 개원 기념식이 코로나 광풍을 뚫고 3년만에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일수로 계산해보니 1092일 만입니다. 감염병으로 인해 전 지구적 재난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회원의 날 즈음에는 모든 상황이 종료되길 비는 마음을 모아 준비중입니다. 우선 날짜와 장소를 알려드리며,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다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 **날짜 : 2022년 08월 27일(토) 15시 ~ 28일(일) 11시**
- **장소 : 고창 베리팜 힐링파크(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610번지)**
- **대상 : 한국고전문화연구원 회원 및 동반자**

전주 기자촌 지역 과거 사진, 문서 자료 구합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오는 6월 2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기자촌지역 재개발에 따른 마을기록화 사업이 현장 인터뷰를 비롯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을기록화 사업 보고서에 삽입될 기자촌 지역과 관련한 근현대 자료를 구합니다.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계시거나 자료 소장자를 알고 계시는 회원께서는 해체되는 마을이 공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을 위해 자료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제공해주신 분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해드립니다.

■ 역사 속의 오늘

쌍굴다리 속 작은연못 - 1950. 7. 26

한국전쟁 당시 대전 방어선이 무너져, 국군과 미군이 퇴각하던 1950년 7월 26일부터 사흘간에 걸쳐,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철교 아래 터널(속칭 쌍굴다리)에 피신한 인근 마을 주민 수백여명이 미군기의 기총소사와 지상군의 사격으로 학살되는 비극이 벌어진다. 살아남은 10여명은 죽음보다 깊은 침묵의 통곡을 견디다 4·19 혁명 직후 미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지만 기각된 채 역사 속에서 사라진 듯 여겨졌다.

한국전쟁 이후 전쟁에서 한국을 '구해준 은인' 인 미군의 범죄를 꺼내는 것은 용공세력임을 자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고, 4·19 혁명 이후 집권한 쿠데타 세력과 이어진 군사정권 아래서 유족들은 암흑의 세월을 지날 수밖에 없었다.

1994년 4월 '노근리양민학살대책위원회' 위원장 정은용(사건 당시 다섯 살 난 아들과 두 살 된 딸 사망 부인 중상의 피해 당사자)이 유족들의 비극을 담은 "그대 우리의 아픔을 아는가" 라는 실록 소설을 출간하면서 이 사건은 다시 일반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한겨레신문은 마을 주민들을 인터뷰한 기사를 그해 5월 4일자로 싣고, 월간 말지의 오연호(현, 오마이뉴스 대표이사) 기자가 이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하여 그해 7월호에 "6·25참전 미군의 충북 영동 양민 300여 명 학살사건" 이라는 제목으로 자세한 내막을 기사화하였다.

1999년 9월 미국 AP통신은 당시 미군은 노근리 부근에서 발견되는 민간인을 적으로 간주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이 명령에 따라 학살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하였다. 이후 국내 언론사들이 앞 다투어 이 학살극에 대해 보도를 시작하여 세상에 그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다. 사건 발생 후 51년이 된 2001년 1월에 이르러서야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으니 그 신산스런 세월을 견뎌온 이들의 포한을 어찌 표현할 수 있을까?

이후 정은용씨가 쓴 실록 소설은 2010년 '작은 연못' 이라는 이름의 영화로 제작되기도 하였다. 이후 한국정부와 미국을 상대로 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지난한 시간을 보내고 2004년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학살 사건을, 적을 소탕하기 위한 작전 중의 부수적 피해로만 봐야 할 것인가? 혹은 전쟁의 온전한 피해자로서 국가가 나서서 사죄해야 할 것인가? 어떠한 정의도, 규범도, 원리도 존재하지 않아 오로지 자의적으로만 해석되는 이 역사에서, 혹은 국가의 수립 과정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다.

지난 7월 14일 대법원은 노근리 사건으로 죽임을 당한 피해자 유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2015년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은 끝내 국가의 책임을 묻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